

강화된 '방역기본수칙', 현장에서서는...

정부 "다중이용시설 방문시 출입자 명부 전원 작성" 다음달 5일부터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 부과 조치 손님 "이해하지만 불편"... 업주 "일일이 안내 곤란"

코로나19 기본방역수칙이 강화됐지만, 정착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6일 제주도는 정부 방침에 맞춰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다음달 11일 자정까지 2주간 유지하기로 결정함과 동시에 '기본방역수칙'을 강화했다. 주요 골자는 다중이용시설에 방문하는 손님은 제주 안심코드 등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출입

자명부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역수칙은 지난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일주일간 계도 기간을 거친 뒤 4월 5일부터 의무화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사업자는 300만원 이하, 개인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의무화를 코 앞에 두고도 출입자명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 벌써

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0일 오후 제주시 아라동의 한 카페에서는 손님들이 제주형 안심코드를 찍거나 출입 명부를 작성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이 작성한 명부에는 '외 2인', '외 3인'이라고 적혀 있었다. 또 다른 카페에서는 "명단을 작성해달라"는 안내에도 제대로 출입자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손님들이 나와 종업원이 재차 안내에 나서는 경우도 목격됐다. 제주시 누웨마루 인근의 한 카페서 만난 도민 A씨는 "방역수칙이 변경된 것을 몰라 평소대로 작성했다"며 "방역을 위해선 어쩔 수 없었

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편해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아라동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업주 C씨는 "업주 입장에서 불편한 점이 많다. 찾아온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따지는 분들도 있어 곤란하기 때문"이라며 "주문을 받고 바쁘게 음료를 만들어야 하는데, 오는 손님들마다 명부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를 다 알리려면 시간이 부족해 일을 못하게 된다"고 토로했다. 도 관계자는 "만약 문제 발생 시 역학조사 등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불편하겠지만 개별적으로 작성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상습 음주·무면허운전 실형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40대가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일 새벽 술을 마신 채로 제주시 노형동 도로에서 차를 몰다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4회에 걸쳐 회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음주운전으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일뿐더러 운전면허도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송은범기자



이틀째 뿌연 도심 30일 제주시 도두봉 정상에 오른 시민들이 황사와 미세먼지에 뒤덮인 제주시가지를 보고 있다. 이상국기자

미세먼지에 노후경유차 3만대 '스톱'

도 비상저감조치 시행... "생계 위해 운전해야 하는데" 하소연 봇물

"수십년간 애지중지하며 타던 차량을 폐차하고 새 차를 구입할 지 고민입니다." 30일 제주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자 도내에서 조정업을 하는 A씨는 속이 타들어 갔다. 2001년식 1t트럭을 이용해 도내 곳곳을 돌며 조정작업을 벌이는 그는 이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서 작업에 필요한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됐고, 이에 하루 수입을 포기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A씨는 "코로나19 여파로 일이 없던 와중에 오랜만에 잡힌 일을 울며겨자 먹기로 취소해야 했다"며 "항후에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것을 대비해 새 트럭을 구입할 지 고민이다"고 말했다. 2003년식 승용차를 몰고 서귀포시에서 제주시로 출퇴근 하는 박모(33)씨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는 것을 당일날 알게 됐다"며 "5등급 차량이라도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운행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저 지원 기준도 복잡해 제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이날 제주지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면서 노후 경유차를 보유한 운전자와 5등급 트럭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영업자들의 크고 작은 불편이 잇따랐다. 특히 이날 오전부터 도청에는 저공해조치 신청에 따른 차량 운행 가능 여부, 과태료 등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며 한때 통화 연결이 지연되

기도 했다. 도에 따르면 2월말 기준 제주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3만4493대다. 이는 제주도내 전체 차량 대수 62만1442대의 5.5% 수준이다. 5등급 차량을 차종별로 보면 화물차가 1만9983대로 가장 많고 승용차 1만1692대, 승합차 2566대, 특수차 252대 순이다. 제주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2018년 3월 5일과 지난해 2월 11일에 시행된 바 있지만 운행제한 조치에 따른 5등급 차량 단속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을 위반해 적발되는 차주에게는 1일 1회 최초 적발지에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끝없는 제2공항 찬반 갈등

찬성측 "제주 국회의원 3인 제2공항 건설 추진 힘써야" 반대측 "국토부 정보 유출 확인되면 제2공항 취소해야"

제주 제2공항 찬성·반대 단체간의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제주제2공항건설촉구 범도민연대 등 도내 8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제2공항 추진연합(이하 연합)은 30일 오전 제주시 연삼로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갈등을 해소하고 화합을 위한 시간이 부족해 일을 못하게 된다"고 촉구했다. 연합은 "국회의원 3인과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은 제2공항을 반대하며 발목을 잡았다"며 "가덕도 신공항은 발 벗고 나서면서 제2공항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도 도민의 하늘길은 불편하고 불안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지역구의 민의에 따라 적극 제2공항 추진에 앞장 서야 한다"며 "제2공항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며 도민갈등을 조장한다면 그런 정치인들을 철저히 배격하고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

민회의(이하 도민회의)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인론 보도에 따르면 제2공항 입지발표 직전, 국토교통부 직원이 부동산 회사를 통해 예정지와 인접한 1만5000여㎡의 토지를 매입하는 등 이 과정에서 직원이 적극 개입했다는 폭로가 나왔다"며 "국토부의 해명은 거짓이고 부동산 투기 적폐가 활개쳤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도민회의는 "제2공항 입지 발표 전인 지난 2015년 6월쯤 한 회사가 11억원에 매입한 해당 토지는 평당 25만원 대였는데, 국토부 직원의 사촌누나가 이사로 재직하는 부동산 회사가 불과 4개월 후인 10월쯤 이를 2배가 넘는 24억원에 급매했다"며 "제2공항 발표 이후 현재 해당 토지 시세는 평당 400만원대로 무려 8배 가까운 시세 차이가 발생했다. 국토부 직원이 사전에 정보를 유출하고 개입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거래"라고 피력했다. 이들은 "국토부 직원 사전정보 유출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즉시 제2공항은 취소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2의 LH 사태가 될 것"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제2공항 부동산투기 실체를 밝혀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업체 무더기 적발

호텔·골프장 7곳 포함 9곳 관련법 적용 후 첫 형사입건

최근 미세먼지와 짙은 황사가 제주 섬 전체를 뒤덮고 있는 가운데,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도내 업체가 무더기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대기배출시설의 오염 정도를 측정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9곳을 적발,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제주자치경찰이 3월 한달 간 제주시 지역 골프장·호텔·세탁업체·자동차정비업체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사업장 대상 현장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발생 정도를 정해진 기한 내에 측정해야 한다.

제주시 소재 골프장, 호텔 등 7개 사업장은 대기배출시설인 사우나용 대형보일러를 운용하며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기기를 부착했음에도 자가측정을 하지 않거나 대행업체에게 측정을 의뢰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자동차업체와 세탁업체는 도장시설 및 세탁용 스팀보일러를 운용하면서도 오염물질 자가측정을 하지 않거나 대행업체에게 측정을 의뢰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번 적발된 사업장들은 지난해 1월부터 강화된 대기환경보전법 적용 이후 처음 형사 입건된 사례다. 관련법 위반 시 기존 과태료 처분에서 형사 처벌로 처분이 강화됐다.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배출하는 경우 배출량 등에 따라 부과되는 초과부과금의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강다혜기자

하하농법 3월의 농사메모

키 위

만감류

양파

마늘

※ 해피한그린 1ℓ 25말 + 글로칼 1봉 25말 = 7일 간격 2회살포 → 형태적 화아 분화

레드향 · 천혜향 · 한라봉

- 보조 가온전 3일 동안 물을 충분히 준다
- 꽃눈이 보이면 해피한그린 + 글루칼을 7일 간격 2회 살포 해준다
- 레드향은 봉소 관주 및 엽면시비를 꼭 할 것 (7월말경 낙과 및 낙엽 배급주위 응고현상 방지효과)

○ 비대와 병해방지를 위해 썰파고 + V패스 + 히토락 + 천연가리를 15일 간격 2회 살포한다 (살균제는 따로 쓸 필요가 없다)

○ 해빙기에 잎지썩음병 방지를 위해 썰파고 + V패스 + 히토락 살포

“하하농법으로 농민들이 하하웃는 그날까지”

(주)포트라 제주지사

(주)포트라 제주지사 제주지사장 부 영 인 H·P 010-2633-5349

SM그룹 에스엠신용정보

생각만해도 머리 아픈 돈, 돈! 최선으로 받아줍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에스엠신용정보**를 선택하십시오!
만족으로 보답해 드립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부동산대금, 투자금,
빌려준돈(판결문, 공증), 약정금, 구상금, 계돈

고객님 언제든지 전화, 방문 상담을 무료로 해드리며 착수금(선불경비)일체 받지 않습니다

에스엠신용정보 제주지사 ☎ 064)756-9041

직원모집 추심관리사, 영업전문직을 모집합니다 064)725-9001